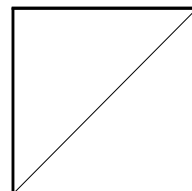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17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4. 1. (제 6 차)

의  
결  
사  
항

에이원자산대부관리(유)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연월일	2020. 4. 1.

## 1. 의결주문

에이원자산대부관리(유)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 2. 제안이유

에이원자산대부관리(유)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수취한 에이원자산대부관리(유)에 대하여 영업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제1항 및 제17조(과태료)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제1항 및 제2항, <별표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및 제19조(과태료 부과에 제척기간)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2020.2.25.) 심의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관련 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토록 함

<별지>

에이원자산대부관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 기관에 대한 조치

○ 에이원자산대부관리(유) : 영업 일부정지 1월 및 과태료 1억원 부과

- 정지 업무 : 영업 일부정지 기간 중 발생한 신규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금지\*

\*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 일부정지 기간에도 다음 업무는 허용

- 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동 변제금의 수령
- ② 문자메시지 및 전화(내전)를 통한 단순정보(연체사실, 연체금액, 계좌번호, 담당자 소속, 성명 및 연락처) 안내
- ③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전 채무이행지체사실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의 통지

## 2. 조치사유

### 가. 채권추심 관련 비용 부당 청구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에이원자산대부관리(유)는 2014.5.8.~2019.1.23. 기간 중 000 등 548명 (560건\*)에게 채권추심에 따른 압류해지비용 등 채권추심비용을 실제 사용된 48.9백만원 보다 7.8백만원을 초과한 56.7백만원을 청구하여 수취한 사실이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105건(초과금액 1.6백만원)을 제외하고 455건(초과금액 6.2백만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 관 계 법 규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 (생략)

6.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7.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③~ ④ (생략)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감독기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2분의 1로 감정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 2천만원

2. 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 1천만원

3. 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 500만원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직전 처분의 다음 차수에 따른 처분을 한다

나. 과태료 금액이란 중 괄호 안의 금액은 과태료 대상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부과기준을 말한다(법제17조제4항 관련)

##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조문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너.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6호	150	300	600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 ④ (생략)

⑤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2에서 정한 횟수를 말한다.

<별표 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

###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3를 위반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을 청구(1차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舊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7.10.19.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 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 1. (생략)
- 2. 과태료 산정방식
  -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 다.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 라.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마.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3.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0>

- (1) 중 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금융업 관련법상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하며, 나.(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가. 가중 사유

(1) ~ (4) (생략)

##### 나. 감경 사유

(1) ~ (2) (생략)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 (9) (생략)

####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략)

####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 가. (생략)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업무를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 가. 삭 제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 영업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경우로서 위법·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 9. (생략)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 바. (생략)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심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생략)

####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1)~(4) (생략)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2013.12.20., 2017.10.19.>

**부칙 <제2017-38호, 2017.10.19.>**

**제2조(과태료 등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이원자산대부관리(유)

2. 제재조치일 : 2020. 4. 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영업 일부정지* 1월, 과태료 1억원

\* 영업 일부정지 기간 중 발생한 신규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정지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채권추심 관련 비용 부당 청구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4.5.8.~2019.1.23. 기간 중 000 등 548명(560건)에게 채권추심에 따른 압류해지비용 등 채권추심비용을 실제 사용된 48.9백만원 보다 7.8백만원을 초과한 56.7백만원을 청구하여 수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가계금융과	여신금융검사국
연 락 처	02-2100-2511	02-3145-8272